

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6781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 : 2023. 9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('22. 7.)에 따라 대구광역시 근로자권의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고용·노사민정 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대구광역시 고용·노사민정협의회」에서 「대구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 위원회」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조항 신설(안 제8조제3항)
- 나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

3. 참고 사항

- 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나. 관계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4조 등 (※ 붙임)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라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3. 8. 21. ~ 9. 11.(21일간)

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 - 4) 갑질영향심사 : 개선의견 없음
 - 5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 - 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 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근로복지기준법」”을 “「근로복지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대구광역시 고용·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고용·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근로복지기준법</u> 」, 「 <u>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 「 <u>근로복지기본법</u> 」, ----- ----- ----- ----- --- |
| 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 | 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. |
|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 | ② ----- -----. |
| 1. 기본계획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 | 1. ----- |
| 2. 근로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정책에 관한 사항 | 2. ----- ----- |
| 3.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| 3. ----- ----- |
| <신 설> |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 <u>대구광역시 고용·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</u> 」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고용·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. |

관 계 법 령

□ 근로복지기본법

제4조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 · 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 · 기금 · 세제 · 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. ③ (생략)

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·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· 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□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

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. ③ (생략)

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

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· ③ (생략)

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3.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· 고용 · 경제 ·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
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 · 군 · 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· 운영,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 ·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대구광역시 고용 ·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3조(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) ①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고용 ·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4. 산업평화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지역 고용 ·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며, 같은 기능을 가진다.

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선정된 산업평화대상 수상업체에게 노사화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

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공무원과 대구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노사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
3.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시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
④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시 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 중에서,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시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위촉한다.

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이 개정안은 기존에 구성된 ‘대구광역시 고용·노사민정협의회’에서 ‘대구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’의 기능을 대신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경제국 고용노동정책과장 최 문 도